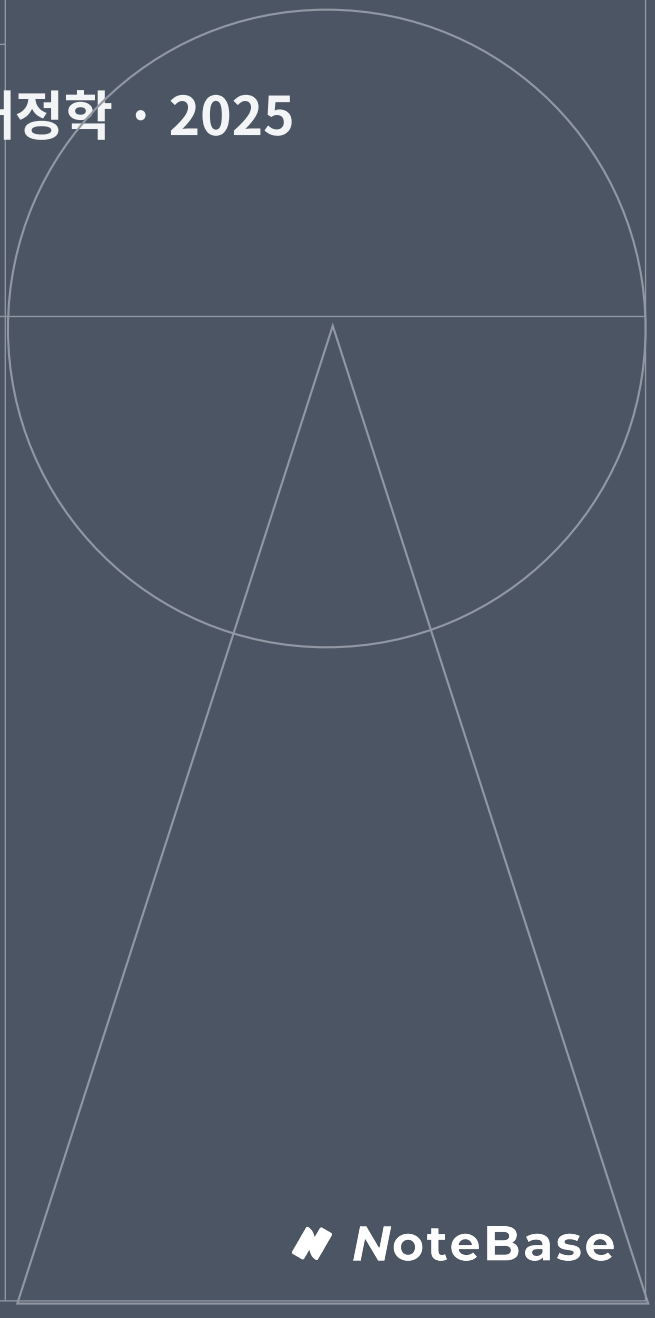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재정학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재정학 · 2025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재정학 · 2025

문 1. 어떤 재화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시장균형 상태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균형거래량의 변화로 옳은 것은?

① 증가한다.

② 감소한다.

③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④ 변함이 없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재화의 거래에 세금이 부과되면 **구매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조세만큼의 차이**가 생긴다. 우하향 수요와 우상향 공급에서는 이 차이 때문에 균형거래량이 감소한다.

핵심 풀이

세금 부과 전에는 수요가격과 공급가격이 같은 지점에서 거래량이 결정된다. 재화의 거래에 양의 세금이 붙으면 같은 거래량에서 구매자가 지불할 가격과 판매자가 수취할 가격 사이에 조세 쐐기가 생겨야 한다.

예를 들어 역수요가 $P_D = a - bQ$, 역공급이 $P_S = c + dQ$이고 $b, d > 0$이라 하자. 거래 한 단위당 세금이 $t > 0$이면 세전에는 $a - bQ_0 = c + dQ_0$, 세후에는 $a - bQ_t = c + dQ_t + t$이므로 $Q_t = Q_0 - \frac{t}{b+d}$이다. 따라서 양의 거래가 유지되는 범위에서 세금 부과로 거래량이 줄어든다. 세금이 매우 크면 거래량은 0까지 줄어들 수 있지만 음수가 되지는 않는다.

직선인 두 곡선의 기울기가 각각 음수와 양수이므로, 조세 쐐기를 수용하려면 거래량이 낮아져야 한다. 따라서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증가하거나 처음에 증가한 뒤 감소하는 것이 아니며, 완전비탄력적인 곡선도 아니므로 변함없다고 볼 수 없다.

NoteBase

문 2.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현재가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자계획의 타당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순편익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② 투자계획의 순편익이 0이 되는 할인율을 구해서 투자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③ 투자계획의 채택 여부는 순편익의 현재가치 0을 기준으로 한다.

④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0보다 크더라도 반드시 국민의 복지수준을 높인다고 볼 수 없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찾는 것은 **내부수익률법**이다. 현재가치법은 주어진 할인율로 편익과 비용을 할인하여 순현재가치를 구한다.

선지별 해설

현재가치법은 서로 다른 시점의 편익과 비용을 같은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한다. 시점 t의 편익을 B, 비용을 C, 사회적 할인율을 r, 사업 기간을 T라고 하면 순현재가치는 $NPV = \sum_{t=0}^{T} \frac{B_t - C_t}{(1+r)^t}$이다. 초기 비용도 t = 0의 비용에 포함한다.

① O: 할인한 편익의 합에서 할인한 비용의 합을 뺀 순현재가치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미래 금액을 그대로 합산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 시점의 가치**로 바꾸어 비교하는 방법이다.

② X: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구하는 것은 **내부수익률법**이다. 내부수익률을 i라고 하면 $\sum_{t=0}^{T} \frac{B_t - C_t}{(1+i)^t} = 0$을 만족하는 i를 구한다. 현재가치법은 반대로 적절한 할인율을 먼저 정한 뒤 그 할인율에서 순현재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한다.

③ O: 독립적인 사업의 기본 채택 기준은 NPV가 0보다 큰지 여부이다. 양수이면 현재가치로 평가한 편익이 비용보다 크고, 음수이면 비용이 더 크다. 0은 편익과 비용이 같아 기본 기준상 채택과 기각에 무차별한 경계이다. 예산 제약이나 상호 배타적인 대안이 있으면 추가 비교가 필요하다.

④ O: 양의 순현재가치는 화폐로 평가한 총편익이 총비용을 넘는다는 뜻이지, 이익과 손실의 분배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수혜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가능성이 있어도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소득분배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NPV가 양수라는 사실만으로 국민의 복지수준이 반드시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내부수익률법을 현재가치법으로 설명한 ②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3. 다음은 양(+)의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재화를 생산하는데 양(+)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가), 시장균형 생산량은 외부효과를 고려한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나).

① (가): 크고, (나): 적다
② (가): 작고, (나): 적다
③ (가): 크고, (나): 많다
④ (가): 작고, (나): 많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생산 과정의 외부편익을 반영하면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보다 낮다**. 시장에서는 생산자가 그 외부편익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최적보다 **적게 생산**한다.

빈칸별 해설

(가)는 '작고'이다. 생산의 양의 외부효과는 생산 활동으로 거래 당사자 밖의 제3자에게 편익이 생기지만 그 편익이 시장 거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이다. 생산 1단위 증가에 따른 외부편익을 MEB, 사적 한계비용을 MPC라고 하면, 사회적 순한계비용은 $MSC = MPC - MEB$이다. 양의 외부편익이 있으므로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작다**.

(나)는 '적다'이다. 다른 왜곡이 없는 통상적인 경쟁시장에서는 생산자가 외부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사적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소비 측의 별도 외부효과가 없다면 시장은 $MB = MPC$에서 균형을 이루지만, 사회적 최적은 $MB = MSC$에서 정해진다. 시장균형 생산량에서는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크므로 생산을 더 늘리면 사회적 순편익이 증가한다. 따라서 시장은 사회적 최적보다 **과소 생산**한다.

그러므로 (가)는 작고, (나)는 적다로 연결되며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4.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플레이션은 실질 조세부담을 감소시킨다.

② 조세부담이 누진적이다.

③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④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정답 1번

①

명목금액으로 정한 과세표준 구간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물가상승에 따라 명목소득만 늘어도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실질소득의 증가 없이 실질 조세부담이 커지는** 인플레이션의 조세증대 효과이다.

②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의 구간별 초과분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이므로,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큰 비율의 세금을 부담한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8M9nF1yAf_zJ5dqyOCvl5HnO7K7_jpS1.webp

③

누진적인 소득세는 **고소득자의 소득 중 더 높은 비율을 세금으로 징수**하므로, 과세 후 소득의 상대적 격차를 줄이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④

초과누진세에서는 평균세율에 낮은 소득구간의 세율도 반영되므로 **마지막 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평균세율 이상**이다. 최저 세율 구간에서는 둘이 같고, 그 위 구간에서는 한계세율이 더 크다.

NoteBase

문 5. 두 재화 X와 Y는 대체관계에 있다. 정부가 X재화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Y재화 시장의 균형거래량과 균형가격에 나타날 현상으로 옳은 것은?

① 균형거래량 증가, 균형가격 상승

② 균형거래량 증가, 균형가격 하락

③ 균형거래량 감소, 균형가격 상승

④ 균형거래량 감소, 균형가격 하락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대체재인 X의 소비자가격이 과세로 오르면 소비자는 Y로 수요를 옮긴다. **Y의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통상적인 우상향 공급곡선 아래에서 거래량과 가격이 함께 상승한다.

핵심 풀이

1. X에 대한 과세의 영향
재화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면 구매가격과 판매자의 수취가격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 통상적인 수요·공급 조건에서는 X의 소비자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X가 상대적으로 비싸진다.

2. 대체재 Y의 수요 변화
X와 Y는 서로 대신 소비할 수 있는 대체재이다. 따라서 X의 가격 상승은 Y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는 Y 자체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곡선상의 이동이 아니라, **Y 수요곡선 전체의 우측 이동**이다.

3. Y의 새 균형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Y의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일반적인 시장을 기준으로, 수요 증가 후에는 기존 가격에서 초과수요가 생긴다. 가격이 오르면서 공급량도 증가하여 더 높은 가격과 더 많은 거래량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Y의 균형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가격은 상승**한다. 거래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연결하는 설명은 대체재에 대한 수요 증가와 맞지 않는다.

NoteBase

문 6. A의 총 소득은 9,000만 원이고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소득은 7,000만 원이다. 소득세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A의 실효세율은? (단, 백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ㄱ. 0에서 2,000만 원까지는 0%
ㄴ.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까지는 10%
ㄷ. 5,000만 원 초과 8,000만 원까지는 30%
ㄹ. 8,000만 원 초과는 50%

① 10%
② 13%
③ 30%
④ 5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과세소득 7,000만 원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세액은 900만 원이다. 실효세율은 이를 **총소득 9,000만 원**으로 나눈 10%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세액 계산의 기준은 공제 후 과세소득 7,000만 원이다. 구간별 세율은 **해당 구간에 속하는 소득 부분에만** 적용하며, 모든 계산 금액의 단위는 만 원으로 둔다.

ㄱ 구간: 처음 2,000만 원에는 0%가 적용되므로 세액은 0이다.

ㄴ 구간: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까지의 소득은 3,000만 원이다. 세액은 3,000 × 0.1 = 300만 원이다.

ㄷ 구간: 과세소득이 7,000만 원이므로 5,000만 원을 넘는 2,000만 원에 30%를 적용한다. 세액은 2,000 × 0.3 = 600만 원이다.

ㄹ 구간: **과세소득이 8,000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50%가 적용되는 소득은 없다. 총소득 9,000만 원을 과세소득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총세액은 0 + 300 + 600 = 900만 원이다. 실효세율은 세액을 **공제 전 총소득 9,000만 원**으로 나눈 비율이다.
$\frac{900}{9{,}000} \times 100 = 10\%$

실효세율은 반올림해도 10%이므로 ①에 해당한다. 900만 원을 과세소득 7,000만 원으로 나눈 약 13%는 이 문항에서 묻는 실효세율과 분모가 다르다.

NoteBase

문 7. 다음의 국세 중에서 목적세인 것은?

① 법인세
② 증여세
③ 증권거래세
④ 교육세

정답 4번

①
법인세는 특정 지출에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일반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보통세**이다.

법인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증여세는 특정 사업의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일반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보통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에 부과하여 일반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보통세**이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이다.

교육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NoteBase

문 8. 후방굴절 형태의 노동공급곡선에서 후방굴절 구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

②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③ 임금과 노동공급은 정(+)의 관계이다.

④ 여가가 정상재일 때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이 나타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후방굴절 구간에서는 임금 상승으로 노동을 줄이는 소득효과가 노동을 늘리는 대체효과보다 크다. 따라서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공급이 줄어 **부(−)의 관계**가 나타난다.

선지별 해설

① O: 임금이 오르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져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리는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여가가 정상재이면 구매력 증가에 따른 소득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후방굴절 구간에서는 **노동을 줄이는 소득효과가 노동을 늘리는 대체효과보다 크다**.

② O: 이 설명은 다른 조건이 같은 상태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비례세율 인상으로 세후 임금이 낮아지는 표준 모형의 해석이다. 후방굴절 구간에서 세후 임금이 하락하면 대체효과는 노동을 줄이는 쪽으로, 소득효과는 노동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하며 후자가 더 크다. 따라서 **같은 후방굴절 구간 안에서는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모든 세제 변경이나 임의의 큰 변화에 무조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③ X: 후방굴절 구간에서는 임금이 상승할수록 노동공급이 감소하므로 **임금과 노동공급은 부(−)의 관계**이다. 임금 상승에 따라 노동공급이 늘어나는 정(+)의 관계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큰 우상향 구간에 해당한다.

④ O: 여가가 정상재이면 소득이 늘 때 여가를 더 소비하려는 소득효과가 생겨 노동공급을 줄일 수 있다. 이 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면 후방굴절이 나타난다. 다만 **여가가 정상재라는 사실만으로 후방굴절이 반드시 발생하지는 않는다**. 정상재라는 조건에 더해 소득효과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한다.

NoteBase

문 9. 리카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보다 국채를 통한 재원조달이 더 효과적이다.

②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면 총수요가 증가한다.

③ 국채발행은 이자율을 상승시켜 소비를 감소시킨다.

④ 국채발행을 통한 감세정책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가계가 국채 상환을 위한 미래 증세를 예상하면 현재 감세분을 저축한다. 정부지출 경로가 같다는 조건에서 감세가 평생 순자원을 늘리지 않으므로 **현재 소비는 변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리카르도 대등정리는 정부지출 경로가 같을 때 현재 조세 대신 국채로 재원을 마련해도 민간 소비 등 실물 배분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명제이다. 미래 조세를 합리적으로 예상하고, 차입 제약이 없으며, 조세가 경제적 선택을 왜곡하지 않고 미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는 장기적 시계 등의 조건을 전제로 한다. 세대가 바뀌는 경우에는 이타적 유산 동기 등 세대 간 연계가 중요하다.

① X: 대등정리에서는 **조세와 국채를 통한 재원조달의 효과가 대등**하다. 국채는 미래 조세로 상환해야 하므로, 국채 조달이 조세 조달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② X: 국채를 발행하여 현재 세금을 줄여도 가계는 미래에 원리금 상환을 위한 세금이 늘어날 것을 예상한다. 현재의 감세분을 소비하기보다 저축하므로, 이 재원조달 방식의 변경만으로 총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

③ X: 대등정리에서는 감세에 따른 민간저축 증가가 정부저축 감소를 상쇄하여 **국민저축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채발행이 이자율을 올리고 소비를 줄인다는 연쇄효과는 이 정리의 결론이 아니다. 재정적자에 따른 일반적인 구축효과 설명과 구별해야 한다.

④ O: 국채발행을 통한 감세는 현재의 조세를 미래로 미룰 뿐이며, 가계가 인식하는 평생 순자원이 증가하지 않는다. 미래 조세에 대비한 저축이 늘어 **현재 소비가 변하지 않는다**. 이는 정부지출까지 늘리는 모든 재정정책이 무효라는 뜻이 아니라, 같은 지출의 조달 방식·조세 시점에 관한 중립성이다.

따라서 리카르도 대등정리를 설명한 것은 ④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국민소득계정 자료에 기초할 때, 이 경제의 조세는 얼마인가? (단, T는 조세, X는 수출, M은 수입이다)

(단위: 조)

국내총생산(Y)	2,000
가처분소득($Y-T$)	1,700
투자(I)	500
소비(C)	1,300
순수출($X-M$)	-200

① 400조

② 300조

③ 200조

④ 100조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표에서 가처분소득을 **국민소득에서 조세를 뺀 값**으로 직접 제시하였다. 따라서 국내총생산과 가처분소득의 차이만 계산하면 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필요한 자료 선택
표의 단위는 조이며, 국내총생산은 $Y = 2000$, 가처분소득은 $Y - T = 1700$이다. 문제에 주어진 가처분소득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한다.

2. 조세 계산
$Y - T = 1700$에서 $T = Y - 1700$이므로, $T = 2000 - 1700 = 300$이다. 따라서 **조세는 300조**이다.

3. 나머지 자료와 구별
투자 $I = 500$, 소비 $C = 1300$, 순수출 $X - M = -200$은 조세를 위와 같이 직접 구할 때 필요하지 않다. 이를 지출항등식 $Y = C + I + G + (X - M)$에 대입하여 얻는 400조는 정부구매 G이지 조세 T가 아니다. 정부구매와 조세가 반드시 같다는 조건은 주어지지 않았다.

NoteBase

문 11. 다음 중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수입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②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③ 자원배분의 교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④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쉽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조세제도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면서 공평성·효율성·신축성을 고려해야 한다. **조세수입 자체의 극대화**는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독립적인 요건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조세수입 자체의 극대화가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목표는 아니다. 과도한 징수는 민간의 경제활동과 후생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재원 확보와 사회적 비용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O: 공평성은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 등 적절한 기준에 따라 조세부담을 분배해야 한다는 요건이다.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비슷하게 대우하는 수평적 공평성과 능력이 다른 사람의 부담을 달리하는 수직적 공평성을 함께 고려한다.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부과한다는 뜻은 아니다**.

③ O: 효율성은 조세가 소비·저축·투자·노동 선택 등을 왜곡하여 생기는 손실을 줄이는 요건이다.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면서 **자원배분 왜곡과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O: 신축성은 경기나 경제구조 변화에 조세제도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변할 때 세부담도 조정되면 **경제 상황에 맞는 부담 조절**과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수입의 극대화를 요구한 ①이 옳지 않다.

NoteBase

문 12. 국민소득결정에 대한 단순 케인즈 모형이 다음과 같고, 정부지출이 25조 증가할 경우, 국민소득의 변화는? (단, 기업투자와 조세는 변함이 없다)

$Y = C + I + G$
$C = 100 + 0.75(Y - T)$
(Y: 국민소득, C: 민간소비, I: 기업투자, G: 정부지출, T: 조세)

① 50조 증가
② 50조 감소
③ 100조 증가
④ 100조 감소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한계소비성향이 0.75이므로 정부지출 승수는 $\frac{1}{1-0.75} = 4$이다. 투자와 조세가 고정된 상태에서 정부지출이 25조 늘면 국민소득은 **100조 증가**한다.

계산 과정

국민소득 균형식에 소비함수를 대입하면 $Y = 100 + 0.75(Y - T) + I + G$이다. 소득이 1만큼 늘 때 소비가 0.75만큼 증가하므로 **한계소비성향은 0.75**이다.

기업투자와 조세는 변하지 않으므로 두 균형의 차이를 취하면 $\Delta Y = 0.75\Delta Y + \Delta G$이다. 이를 정리하면 $0.25\Delta Y = \Delta G$, 따라서 $\Delta Y = \frac{1}{1-0.75}\Delta G = 4\Delta G$가 된다. 정부지출이 소득을 늘리고 그 소득의 일부가 다시 소비되는 과정 때문에 **정부지출 승수가 4**가 된다.

정부지출 증가 25조를 적용하면 국민소득 변화는 $4 \times 25 = 100$조이다. 조세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조세 인상 효과를 빼거나 균형재정승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소득은 100조 증가하므로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3. 개인의 소비지출액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출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비 대상이 되는 물건에 부과되는 물세이다.

② 저축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간 상대가격을 변화시킨다.

③ 개인의 지출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소득세와 달리 노동시장에서 교란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개인 지출세는 소비지출액을 개인별로 파악하여 과세하므로 **지출 규모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개인 지출세는 개별 물건의 거래 자체에 부과하는 물세가 아니라 **개인의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부담을 정하는 인세**이다. 개인별 지출을 합산하므로 인적 사정이나 지출 규모에 따른 세율 구조를 반영할 수 있다.

② X: 저축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출세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로 저축 수익률을 낮추는 소득세와 구별된다. **두 시기의 소비에 같은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기본 모형**에서는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저축 제외 자체가 두 소비의 상대가격을 바꾼다는 설명은 반대이다.

③ O: 개인별 소비지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파악하므로 지출 구간에 따라 세율을 높이는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는 이유만으로 비례세율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X: 지출세는 소비의 세후 가격을 높여 같은 노동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소비량을 줄인다. 따라서 소비를 얻기 위한 노동과 여가 사이의 상대적 유인이 달라져 **노동·여가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 시점 간 소비 선택의 중립성과 노동시장 중립성은 다르다.

따라서 개인의 지출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③이 옳다.

NoteBase

문 14. 우리나라 조세수입 구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 비율이 지방세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다.

② 전체 조세수입 중에서 간접세 비중이 직접세 비중보다 항상 높다.

③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세수 기준으로 3대 세목에 해당한다.

④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총세수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원이 국세에 집중되어 있어 **국세 비중이 지방세보다 높다**. 2023년 결산 기준으로도 총조세의 약 4분의 3이 국세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큰 세원이 국세에 배분되어 있어 국세 비중이 지방세보다 높다. 예를 들어 2023년 결산 기준 국세는 약 344.1조 원, 지방세는 약 112.5조 원으로, 총조세에서 각각 **75.4%와 24.6%**를 차지했다. 이는 조세수입의 귀속 구분이며,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까지 반영한 최종 지출 비중과는 다르다.

② X: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은 세제와 경기, 소득·소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간접세 비중이 **항상 더 높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인세와 같은 직접세의 세수 비중이 크다. 직접세는 소득·재산 등을 대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는 거래·소비 과정에서 부과되는 조세로 구분한다.

③ X: 세수 규모가 큰 대표적인 3대 세목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이다. 2023년 국세수입은 각각 약 115.8조 원, 80.4조 원, 73.8조 원이었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가가치세 대신 넣은 것이 오류이다.

④ X: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시·군·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은 취득세·지방소비세 등이며, 재산세가 광역자치단체 총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나 특별자치단체의 특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세수입 구조의 특징을 설명한 것은 ①이다.

NoteBase

문 15. 조세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부문의 특정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재정을 의미한다.

②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등이 그 예이다.

③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④ 조세지출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역전된 보조(upside-down subsidy)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조세지출은 정부가 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세수를 포기하는 간접 지원**이다. 특정 행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도 직접 재정지출과는 지원 방식이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X: 조세지출은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비과세·감면·공제 등의 조세상 특례를 제공하여 **정부가 거둘 세수를 포기하는 간접 지원**이다. 정부가 예산에서 보조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직접 재정지출과 구별된다. 다만 수혜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지출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

② O: 투자세액공제는 일정한 투자에 대해 납부할 세액을 줄여 기업의 투자 비용을 낮춘다. 기업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도 세수 감소를 통해 투자를 지원하므로 조세지출의 사례이다.

③ O: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 특례로 인한 세수 감소와 수혜 현황 등을 파악하고 예산과 함께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간접 지원을 공개·평가하여 무분별한 확대를 억제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④ O: 누진세제 아래에서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받으면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의 절세액이 더 클 수 있다**. 이처럼 더 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 '역전된 보조'라는 비판을 받는다. 다만 모든 조세지출이 반드시 역진적인 것은 아니며, 공제 방식과 수혜 요건에 따라 분배 효과가 달라진다.

NoteBase

문 16.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방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방식은 법인이윤 전체를 주주에게 귀속시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② 조합방식은 일부 주주들의 현금흐름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③ 자본이득방식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④ 배당세액공제제도는 개인 주주의 소득세 납부시 법인세 과세분을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자본이득방식은 법인세를 폐지하고 배당과 자본이득을 주주 단계에서 과세하는 **완전통합방식**이다. 배당된 이윤만 조정하는 부분통합방식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은 동일한 법인이윤에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의 세금이 중복되는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다. 재정학의 이론적 분류에서 완전통합은 배당이윤과 유보이윤을 함께 대상으로 하고, 부분통합은 주로 배당이윤의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① O: 조합방식은 법인을 주주들의 조합처럼 취급하여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윤 전체를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귀속시키고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 별도의 법인세 대신 각 주주의 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완전통합방식이다.

② O: 조합방식에서는 법인이 이윤을 유보하여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그 주주에게 귀속된 이윤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현금배당을 받지 못한 주주가 세금을 낼 자금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③ X: 자본이득방식은 부분통합이 아니라 **완전통합방식**이다. 법인세를 폐지하고 주주가 받는 배당과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에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며, 이론적인 완전통합안에서는 자본이득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유보이윤에 따른 주식 가치 상승까지 주주 단계의 과세대상으로 포괄하려는 방식이다.

④ O: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배당소득에 대응하여 법인 단계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개인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법인이 낸 모든 세금을 모든 주주에게 무조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배당에 귀속되는 법인세를 조정한다는 의미이며 부분통합방식에 속한다.

NoteBase

문 17.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는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조세가 민간의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초과부담을 발생시킨다.

③ 인두세는 장기적으로 자녀 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과부담을 발생시킨다.

④ 조세로 인해 상대가격이 변화되기 때문에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여가에 직접 과세하지 않더라도 노동소득에 세금을 매기면 세후 임금과 여가의 기회비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노동·여가 선택이 왜곡**되어 노동시장에서도 초과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초과부담은 조세로 민간이 부담하는 후생 손실 중 **정부가 얻는 세수를 넘어서는 부분**이다. 기존 왜곡이 없는 시장에서 조세가 상대가격을 바꾸어 소비·노동·저축 등의 선택을 왜곡하면, 세수 이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효율성 손실이 생길 수 있다.

① X: 여가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노동소득에 과세하면 세후 임금이 낮아져 **소비와 여가의 상대가격**이 바뀐다. 여가의 기회비용이 달라지므로 노동과 여가의 선택에 대체효과가 생겨 노동시장에서도 초과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여가의 비과세가 노동시장 왜곡의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

② O: 조세가 한계적인 선택에서 부담하는 가격이나 얻는 보상을 바꾸면 민간은 세전과 다른 의사결정을 한다. 이러한 선택의 왜곡은 초과부담의 원인이다. 다만 어떤 행동을 하든 세액이 변하지 않는 진정한 정액세까지 모든 조세가 반드시 왜곡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③ O: 과세 대상 인구가 고정되어 있고 개인의 선택과 관계없이 세액이 정해지는 인두세는 정액세로 보아 초과부담이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선지는 **장기적으로 자녀 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부담할 총세액이 달라지면 추가 자녀의 비용이 변하여 출산 결정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이 범위에서는 초과부담이 생길 수 있다.

④ O: 조세가 재화 사이 또는 소비와 여가 사이의 상대가격을 바꾸면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세금 회피를 위한 소비·생산·노동의 조정으로 유익했던 거래나 활동이 줄어드는 것이 초과부담의 기본 원리이다. **세수의 크기나 소득효과 자체**와 상대가격 왜곡에 따른 효율성 손실을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문 18.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재화에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비례세적 특성을 가진다.

②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품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된다.

③ 소비형 부가가치세제하에서는 자본재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④ 부가가치세는 생산단계별 부가가치에 과세하기 때문에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의 유인이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투자용 자본재의 구입액 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므로 자본재 투자에 대한 세부담을 제거하여 투자에 유리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과 소득에 대한 부담이 비례한다는 것은 다르다. 소비지출에 비례하는 세금이라도 저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이 더 높으면 **소득 대비 세부담은 역진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실제 부가가치세에는 면세·영세율 등이 있으므로 모든 재화가 예외 없이 동일 세율로 과세되는 것도 아니다.

② X: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최종 소비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수출국의 세부담을 제거하고 수입국에서 과세하여 **동일 소비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 취지이다.

③ O: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투자용 자본재 구입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거나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자본재 투자에 세부담이 누적되지 않게 한다. **자본재 투자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을 줄여** 기업투자에 유리한 효과를 가진다.

④ X: 각 단계의 부가가치만 과세하고 매입세액을 적절히 공제하면 단계별 세액의 합은 최종 소비가치에 대한 세액과 같아진다. 따라서 **거래 단계를 줄여 누적세를 피하려는 수직통합 유인**은 일반적인 거래세와 달리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공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본 구조에서의 설명이다.

따라서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자본재 공제와 투자 효과를 설명한 ③이 옳다.

NoteBase

문 19. 최근 단일세율소득세(flat rate income tax)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적공제를 충분히 허용하여 면세점을 높이면 누진성도 높일 수 있다.

② 조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③ 합법적 조세회피를 줄일 수 있다.

④ 각종 공제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수직적 공평성을 증가시킨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단일세율제의 일반적 논거는 **각종 특례를 정비한 단순한 과세 체계**이지 여러 공제제도를 확대하는 데 있지 않다. 기본적 인적공제로 면세점을 높여 누진성을 확보하는 것과 개별 특례를 늘리는 것은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O: 단일한 한계세율을 적용해도 일정한 인적공제를 두면 평균세율은 소득과 함께 높아질 수 있다. 소득을 Y, 공제액을 A, 세율을 t라고 할 때 Y > A인 구간에서 세액은 $T = t(Y - A)$, 평균세율은 $\frac{T}{Y} = t\left(1 - \frac{A}{Y}\right)$이다. 공제액이 클수록 면세점이 높아지고 저소득자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줄일 수 있으므로, **단일세율이 반드시 비례적인 평균세율을 뜻하지는 않는다**.

② O: 세율 체계와 과세표준을 단순화하면 세액 계산과 신고·심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여러 특별 공제·감면을 정비하는 단순한 과세 체계는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의 근거가 된다.

③ O: 소득 구간·소득 종류별 세율 차이와 복잡한 특례를 줄이면 소득의 귀속 시기나 형태를 바꾸어 세부담을 줄일 유인이 작아질 수 있다. 따라서 과세 기반의 정비를 함께 하는 단일세율제는 합법적 조세회피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세율을 하나로 만든다고 모든 회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④ X: 단일세율제 도입 주장은 보통 각종 특별 공제·감면을 정비해 과세 기반을 넓히고 제도를 단순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 **다양한 공제제도의 확대**가 그 일반적 근거는 아니며, 그러한 확대가 수직적 공평성을 반드시 높이지도 않는다. 저소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인적공제·면세점과 복잡한 개별 특례의 확대를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문 20. 정부부문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나 이들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다.

② 국민에 대해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정부부문의 재화나 서비스는 주로 비시장배분(non-market rationing)에 의해 배분된다.

④ 정부부문의 경제활동은 자발적 교환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정부부문은 조세·규제와 같은 **법적 강제력과 집단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활동한다. 개별 당사자의 동의에 기초한 자발적 교환은 시장부문의 기본 원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민주적인 정부부문에서는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표자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명된 공직자들이 운영을 맡는다. 운영 책임은 기업의 소유권이나 이윤 배분이 아니라 **정치적 위임과 공적 책임**에 기초한다.

② O: 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하고 규제를 집행하는 등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개별 국민이 각 조세나 규제에 동의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의 강제력은 법과 적법절차에 의해 제한된다.

③ O: 정부의 재화·서비스는 주로 법적 자격, 필요, 정책 목표, 예산과 행정 기준 등에 따라 배분된다. 시장가격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만으로 공급 대상을 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시장배분**이 중심이다. 공공요금이나 사용료를 받는 서비스도 있으므로 모든 정부 서비스가 무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④ X: 자발적 교환은 거래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여 교환하는 시장부문의 기본 원리이다. 정부부문은 조세·규제와 집단적 의사결정을 활용하므로 그 경제활동 전체를 **개별 당사자의 자발적 교환에 기초한다**고 설명할 수 없다. 정부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맺는 일부 거래에 자발적 교환이 존재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부문의 기본 원리를 정부부문의 일반적 특징으로 제시한 ④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21. 공공재 공급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적다수결제도하에서 의안에 찬성을 많이 할수록 외부비용(external cost)은 감소한다.

② 만장일치제도하에서는 항상 파레토 개선이 달성된다.

③ 다수결투표제도하에서는 선호의 강도가 반영되지 않는다.

④ 점수투표제도하에서는 투표자들의 전략적 행위로 인해 투표의 역설이 발생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점수투표에서는 대안별 합산 점수로 순위를 정하므로 **다수결의 순환적 집단선호**라는 투표의 역설과 구별된다. 선호를 과장하거나 숨기는 전략적 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곧 투표의 역설을 뜻하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집단적 의사결정에서는 의결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외부비용, 합의를 얻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비용, 개인의 선호를 집계하는 방식의 특성을 구별해야 한다.

① O: 최적다수결 모형에서는 의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 비율을 높일수록 반대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줄어 기대 외부비용이 감소한다. 반면 더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는 의사결정비용은 증가하므로,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찬성 기준이 최적이다. 이는 특정 표결에서 찬성표가 늘어나는 현상 자체보다 의결에 필요한 동의 수준을 비교하는 설명이다.

② O: 만장일치의 파레토 개선 성질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에 따라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채택하는 개선안을 뜻한다. 손해를 보는 사람은 거부할 수 있으므로 누구의 후생도 낮아지지 않고 적어도 누군가의 후생이 높아지는 안이 통과한다는 원리이다. 다만 모든 안건에서 합의가 반드시 성립하거나 개선이 지체 없이 실행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만장일치에는 협상 지연과 높은 의사결정비용이 따를 수 있다.

③ O: 다수결에서는 강하게 찬성하는 사람도 약하게 찬성하는 사람도 한 표를 행사한다. 따라서 찬반의 방향과 인원수는 반영하지만, 선호가 얼마나 강한지는 표의 수만으로 반영하지 못한다.

④ X: 투표의 역설은 개인의 선호가 각각 일관적이어도 다수결로 두 대안씩 비교한 집단선호가 순환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A가 B에, B가 C에, C가 A에 이기는 관계가 생길 수 있다. 점수투표는 대안별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하므로 이와 같은 다수결 순환과는 다르다. **전략적 점수 부여로 진실한 선호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와 투표의 역설을 혼동한 진술이다. 동점이나 전략적 행위의 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22. 정부 실패의 요인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관료부문의 지대추구행위

② 시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 부족

③ 공공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④ 정책결과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공공재의 비경합성·비배제성은 무임승차와 민간의 과소 공급 등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특성이다. 정부 실패는 정부의 정보 부족, 사익 추구, 정책결과 예측의 한계 등과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정부 실패는 정부 개입이 정보·유인·집행상의 한계 때문에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거나 의도한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이유**와 **정부의 개입이 실패하는 원인**을 구별해야 한다.

① O: 관료나 관련 집단이 공익보다 예산·권한·특혜 등 자신의 이익을 얻는 데 자원을 사용하면 지대추구가 발생한다. 그 과정에서 생산적이지 않은 경쟁과 규제의 왜곡이 생겨 정부 개입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② O: 정부도 시장 참여자의 선호·생산비용·행동 등에 관한 정보를 완전하게 알 수는 없다.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면 지원 규모나 규제 기준을 적절하게 정하기 어려워 잘못된 개입과 자원 배분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정보가 부족한 주체는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정부이다.

③ X: 공공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은 일반적으로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공공재의 특성**이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성을 줄이지 않는 성질이고, 비배제성은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을 이용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성질이다. 특히 비배제성으로 무임승차가 발생하면 민간 공급자가 편익에 상응하는 대가를 회수하기 어려워 과소 공급될 수 있다. 이는 정부 개입의 근거이지, 그 자체가 정부 실패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

④ O: 정책은 사람들의 대응과 시장 여건 변화 등을 통해 복잡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이러한 파급효과와 부작용을 정확히 예상하지 못하면 의도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결과 예측의 어려움은 정부 실패의 요인이다.

NoteBase

문 23. 가치재(merit goods)와 비가치재(demerit good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온정주의적인 측면에서 가치재 소비를 늘리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 주권주의와 상충된다.

② 술이나 담배에 죄악세를 부과한다면 정부가 술, 담배를 비가치재로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비가치재에 대한 소비규제는 소비자를 위한 결정이므로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공공교육, 의료서비스 등은 가치재의 예로 볼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비가치재 규제가 소비자를 위한 목적이라도 개인의 선택을 정부가 제한하면 **소비자 주권과 상충**할 수 있다. 보호 목적과 선택권 제한 여부는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치재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만으로는 충분히 소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회적으로 소비를 권장하는 재화이다. 정부가 개인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한다는 온정주의에 따라 개입하면 **소비자 자신의 선택을 우선하는 소비자 주권**과 충돌할 수 있다.

② O: 술·담배의 소비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죄악세로 억제하는 것은 비가치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다. 소비자의 자기 피해나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③ X: 규제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지는 별개이다. 비가치재 소비를 정부가 대신 판단하여 제한하면 **소비자 보호 목적이어도 소비자 주권과 상충**할 수 있다. 정당화 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권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④ O: 공공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개인과 사회에 유익하지만 정보 부족이나 비용 부담 등으로 충분히 소비되지 않을 수 있어 소비가 권장되는 가치재의 예이다. 가치재 여부는 **소비를 장려할 사회적 가치 판단**에 관한 것이며, 반드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순수공공재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를 위한 규제라는 이유로 주권 침해를 부정한 ③이 가장 옳지 않다.

NoteBase

문 24.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개입의 근거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서비스의 수요자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므로 정부가 개입해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② 의료서비스 수요자들의 과잉진료라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필요하다.

③ 상품평등주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필요하다.

④ 민간 의료보험 시장에서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 모두를 가입시키는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필요하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보험으로 본인부담이 낮아지면 의료이용이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적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방지되는 것은 아니며, 도덕적 해이는 공적 보험에서도 별도의 설계로 다루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개입은 의료 정보의 비대칭, 최소한의 의료 접근 보장, 위험집단의 폭넓은 결합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이전의 위험 선별 문제인 역선택과 보험 가입 이후의 행동 변화인 도덕적 해이는 구별해야 한다.

① O: 의료서비스는 전문성이 높아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이나 질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서비스의 질 평가, 정보 제공, 자격과 안전기준 관리 등 정부개입의 근거가 된다. 정부개입이 항상 완전한 평가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

② X: 보험이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면 수요자가 직접 부담하는 가격이 낮아져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수요자 측 도덕적 해이는 민간보험뿐 아니라 공적 보험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적 보험의 도입 자체가 과잉이용을 막는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본인부담이나 적정성 관리 같은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며, 모든 의료이용 증가를 불필요한 진료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③ O: 상품평등주의는 소득 차이가 있더라도 의료와 같은 특정 필수 서비스는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지불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의료보험을 마련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의 근거가 된다.

④ O: 보험자가 개인의 건강위험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위험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위험이 낮은 사람은 가입을 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입자의 평균 위험과 보험료가 상승하는 역선택 문제가 생긴다. 전 국민을 가입시키는 방식은 저위험자와 고위험자를 함께 포함하여 이러한 선택적 이탈을 줄이고 위험분산의 범위를 넓힌다.

NoteBase

문 25. 분배 정의(distributive justice)에 대한 관점들을 설명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평등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은 동등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재산 및 소득 등 물질적 가치도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공리주의자들은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간 소득에 대한 효용함수가 다른 경우에도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가질 권리에 따라 물질적 가치가 소유되는 것이 정의로운 분배상태라고 주장한다.

④ 롤스(J. Rawls)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후생이 극대화되도록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공리주의는 소득의 동일성이 아니라 **효용의 합계 극대화**를 기준으로 한다. 개인별 효용함수가 다르면 한계효용을 같게 하는 배분에서 소득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균등 분배가 항상 결론이 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문항에서 말하는 평등주의는 모든 사람의 동등한 도덕적·사회적 가치를 출발점으로 삼아 재산과 소득 등 물질적 자원의 평등한 분배를 중시하는 관점이다. 분배 결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 자체에 가치를 둔다는 점에서 총효용이나 소유권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삼는 관점과 구별된다.

② X: 공리주의의 기준은 **사회 구성원의 효용 합계를 극대화**하는 것이지, 어떤 조건에서나 소득을 같게 나누는 것이 아니다. 총소득이 고정되고 이전 비용이 없으며 효용을 개인 간 비교할 수 있다는 단순 모형에서는 소득의 한계효용을 같게 하는 배분을 찾는다. 개인의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한계효용이 체감하면 균등 분배가 도출될 수 있지만, **효용함수가 다르면 최적 소득도 다를 수 있다**.

③ O: 정당한 소유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분배관은 획득과 이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강조한다. 여기서는 결과가 똑같은지보다 **각자가 가질 정당한 권리**가 핵심 기준이 된다. 이는 문항의 권리 중심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이며, 모든 자유주의 사상이 동일한 분배 원칙을 주장한다는 뜻은 아니다.

④ O: 롤스의 차등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려면 **가장 불리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재정학의 단순화된 사회후생 모형에서는 최소 후생을 최대화하는 맥시민 기준으로 설명한다. 다만 롤스의 최소수혜자를 소득만으로 정의하는 것은 단순화이며,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도 함께 전제된다.

NoteBase

문 26. 자연 독점인 공기업의 공공요금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기업이 생산하고 가격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할 수 없다.

②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를 도입하면 해당 공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생산량도 최적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다.

③ 한계비용에 일치하도록 가격을 설정하면, 경제적 이윤은 음(-)이 된다.

④ 평균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러 공기업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자연독점에서는 한 기업이 시장수요를 공급하는 편이 비용이 낮다. 생산을 여러 공기업에 분산하면 고정비가 중복되고 **규모의 경제를 잃어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자연독점은 시장수요를 여러 기업이 나누어 공급하는 것보다 한 기업이 공급할 때 총비용이 더 낮은 경우이다. 이 문항은 시장수요와 관련된 생산 구간에서 규모의 경제로 평균비용(AC)이 감소하여 한계비용(MC)보다 높은 전형적인 모형을 전제로 한다.

① O: 규제 없는 민간 독점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계수입(MR)과 MC가 같은 생산량을 선택한다. 우하향 수요에서 이때 가격은 MC보다 높고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작다. 다른 왜곡이 없는 경우 사회적 최적은 **가격이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생산량에서 달성된다.

② O: 이부가격제는 고정된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비례하는 요금을 결합한다. **단위당 사용료를 MC에 맞추고 기본요금으로 부족한 비용을 회수**하면 이용량 선택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기본요금 때문에 이용자가 가입을 포기하지 않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

③ O: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MC가 AC보다 낮다. 가격을 MC로 정하면 가격이 평균비용을 밑돌기 때문에 총수입이 총비용에 미달한다. 생산량을 Q라고 하면 경제적 이윤은 $\pi = (P - AC)Q$이므로, 양의 생산량에서 음수가 된다.

④ X: 여러 공기업으로 생산을 분산하면 시설·고정비가 중복되고 각 기업의 생산규모가 줄어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평균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생산자를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은 자연독점의 비용 구조와 반대된다. 한 공급자의 비용상 이점을 활용하되 요금 규제나 적절한 비용 회수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평균비용을 낮추기 위해 여러 공기업에 생산을 분산하자는 ④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27.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교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조건부교부금은 지방정부 주민들의 사적재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② 대응교부금(matching grants)은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의 비용 중 일정부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의 교부금이다.

③ 지방정부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동기가 클 경우 교부금의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비대응교부금(non-matching grants)은 대응교부금과 달리 아무런 조건없이 교부하는 교부금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비대응교부금은 지방정부의 지출에 연계한 대응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대응이라고 해서 용도 조건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무조건부교부금은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가용 재원을 늘린다. 지방정부가 재원 증가분을 공공서비스 확대뿐 아니라 **주민의 지방세 부담 경감**에 활용하면 주민의 가처분소득과 사적재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

② O: 대응교부금은 지방정부가 해당 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에 연계하여 중앙정부가 일정 비율 등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가 사업을 추가로 수행할 때 부담하는 **실질적인 한계비용을 낮추어** 해당 사업의 지출을 유도한다.

③ O: 끈끈이 효과는 지방정부가 받은 교부금이 같은 규모의 주민소득 증가보다 공공지출을 더 크게 늘리는 현상이다. 예산을 확대하려는 관료가 교부금을 감세보다 지출 증가에 사용하려 하면 **정부에 들어온 돈이 정부 지출에 남는 경향**을 설명할 수 있다.

④ X: 비대응교부금은 지방정부의 지출액에 비례한 대응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교부금이다. **대응 부담의 유무와 용도 제한의 유무는 별개**이므로 비대응교부금에도 특정 사업에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아무런 용도 조건이 없다는 무조건부교부금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비대응교부금을 무조건부교부금과 동일시한 ④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28. 애로우(Arrow)는 개인의 선호를 사회 전체의 선호로 종합시킬 때 만족해야 할 조건을 제시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후생의 극대화

② 파레토 원칙

③ 비독재성

④ 무관한 선택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애로우의 조건은 **개인의 선호를 사회적 선호로 집계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는 목표 자체는 파레토 원칙·비독재성·무관한 선택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같은 집계 조건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사회후생의 극대화는 어떤 사회적 평가 기준 아래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려는 목표이다. 애로우가 제시한 것은 **개인의 선호를 사회적 선호 순서로 집계하는 규칙의 조건**이므로, 사회후생의 극대화 자체는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O: 파레토 원칙은 모든 개인이 대안 A를 B보다 엄격히 선호하면 사회도 A를 B보다 선호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개인들의 일치된 선호를 사회적 판단이 거스르지 않도록 요구한다.

③ O: 비독재성은 다른 사람들의 선호와 관계없이 특정 개인의 선호가 언제나 사회적 선호를 결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어떤 사안에서 한 사람의 의견이 결과와 같다는 것만으로 독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O: 무관한 선택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은 A와 B 사이의 사회적 순위가 개인들의 A와 B 사이의 선호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모든 개인의 A·B 간 순위가 그대로라면, 제3의 대안 C에 대한 선호가 달라져도 사회의 A·B 간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NoteBase

문 29. A와 B는 공공재인 가로등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가로등에 대한 A와 B의 수요함수는 $Q = 10 - P$로 동일하다. 가로등의 설치비용이 1개당 6원일 때,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가로등의 수량은? (단, Q는 가로등의 수량, P는 가로등의 가격이다)

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공공재는 같은 수량에서 A와 B의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합산**한다. $(10 - Q) + (10 - Q) = 6$을 풀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수량은 $Q = 7$, 즉 7개이다.

계산 과정

공공재인 가로등은 A와 B가 같은 수량을 함께 사용한다. 따라서 개인별 수요량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수량에서 각자의 한계편익을 더해 사회적 한계편익을 구한다.

주어진 개인 수요함수 $Q = 10 - P$를 역수요함수로 바꾸면 $P_A(Q) = P_B(Q) = 10 - Q$이다. 여기서 가격은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할 때 각 사람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 즉 개인별 한계편익을 나타낸다.

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하면 사회적 한계편익은 $SMB(Q) = P_A(Q) + P_B(Q) = 20 - 2Q$이다. 가로등 한 개의 설치비용이 6원이므로 한계비용은 $MC = 6$이다.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내부해에서는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야** 한다. 따라서 $20 - 2Q = 6$, $2Q = 14$, $Q = 7$이다. 이때 각자의 한계편익은 $10 - 7 = 3$원이고, 두 사람의 합계 6원이 한계비용과 일치한다.

가로등 수량이 7개보다 작으면 사회적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크고, 7개보다 크면 작아지므로 순편익은 7개에서 최대가 된다. 따라서 도출한 수량 7개는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30. 재화 X와 Y는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생산하는데, X는 노동집약적인 재화이고 Y는 자본집약적인 재화이다. 정부가 X에만 조세를 부과했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에 불리한 소득분배가 발생한다.

② 생산의 파레토 최적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③ X의 생산은 감소하고 Y의 생산은 증가한다.

④ X와 Y 모두 노동집약도가 증가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X에 대한 상품세는 재화의 가격을 왜곡하지만, 두 생산 부문은 여전히 같은 노동·자본 가격에 직면한다. 따라서 부문 간 한계기술대체율이 같아지는 **생산요소 배분의 효율 조건**은 유지되며, 경제 전체의 효율성 문제와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이 문항은 두 재화가 경쟁적으로 생산되고, 노동과 자본이 부문 사이를 이동하며 총요소 공급은 고정된 표준 일반균형을 전제로 한다. X의 상품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이므로 특정 부문에서 사용하는 노동이나 자본에만 별도로 과세하는 경우와 구별한다.

① O: 노동집약적인 X의 생산이 줄면 상대적으로 노동이 많이 방출되고, 자본집약적인 Y의 생산 확대는 상대적으로 자본 수요를 많이 늘린다. 그 결과 **노동의 상대보수인 임금·자본수익률 비율이 하락**한다. 표준 모형에서 이는 노동에 불리하고 자본에 유리한 소득분배 변화를 뜻한다.

② X: 상품 X에 대한 세금은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재화가격에 차이를 만들지만, 두 생산 부문이 직면하는 임금 w와 자본수익률 r을 서로 다르게 만들지는 않는다. 각 부문이 비용을 최소화하면 $MRTS_{LK}^{X} = w/r = MRTS_{LK}^{Y}$가 유지되므로 **생산요소 배분의 파레토 최적 조건은 충족**된다. 다만 상품세로 소비자의 한계대체율과 생산의 한계변환율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경제 전체의 효율성까지 유지된다는 뜻은 아니다.

③ O: X에만 세금이 붙으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X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X 수요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생산자원이 X에서 Y로 이동하여 X 생산은 감소하고 Y 생산은 증가한다.

④ O: 노동의 상대가격 w/r이 하락하면 두 부문 모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노동을 자본 대신 더 사용한다. 따라서 각 재화 생산의 **노동·자본 투입비율이 모두 상승**한다. 이는 각 부문의 요소 비율이 바뀐다는 뜻이며, 경제 전체의 노동 총량이 늘었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31. 어떤 재화의 시장공급함수는 $Q^S = P$, 시장수요함수는 $Q^D = 900 - 2P$이다. 정부가 소비자에게 재화 1단위당 T만큼의 세금(단, $0 < T < 450$)을 부과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이다)

① 생산자 수취가격은 하락한다.

② 시장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③ 소비자는 $\frac{T}{3}$의 세금을 부담한다.

④ T가 증가할수록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조세수입은 $R(T) = 300T - \frac{2T^2}{3}$으로 T = 225에서 최대이다. **225를 넘으면 세금이 증가해도 조세수입은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과세 전에는 $P = 900 - 2P$이므로 가격과 거래량은 모두 300이다. 과세 후 생산자 수취가격을 P_s, 소비자 지불가격을 P_c라 하면 **두 가격의 차이는 단위당 세금**이다.
$P_c = P_s + T, P_s = 900 - 2(P_s + T)$
따라서 $P_s = 300 - \frac{2T}{3}, P_c = 300 + \frac{T}{3}, Q = 300 - \frac{2T}{3}$이다.

① O: 생산자 수취가격은 $300 - \frac{2T}{3}$이므로 과세 전 300보다 낮다. 소비자에게 법적으로 부과하더라도 **생산자에게도 가격 하락의 형태로 부담이 귀착**된다.

② O: 거래량은 $Q = 300 - \frac{2T}{3}$으로 과세 전 300보다 감소한다. 주어진 0 T450에서 거래량은 양수이며 세금이 커질수록 줄어든다.

③ O: 소비자 지불가격은 $300 + \frac{T}{3}$으로 상승하므로 소비자의 단위당 경제적 부담은 $\frac{T}{3}$이다. 생산자의 단위당 부담은 $\frac{2T}{3}$이므로 양자의 합은 T가 된다.

④ X: 조세수입은 **단위당 세금과 과세 후 거래량의 곱**이다.
$R(T) = T\left(300 - \frac{2T}{3}\right) = 300T - \frac{2T^2}{3}$
$R'(T) = 300 - \frac{4T}{3}$이므로 T = 225에서 최대가 된다. 0 T225에서는 증가하지만 225 T450에서는 거래량 감소의 영향으로 조세수입이 감소한다.

따라서 조세수입이 T의 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32. 계층별 소득분배의 불평등 지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애킨슨(Atkinson) 지수는 소득분배에 대한 주관적 가치판단이 반영되어 있다.

② 로렌츠(Lorenz)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는 균등하다.

③ 지니(Gini) 계수가 1이면 완전히 균등한 소득분배를 의미한다.

④ 애킨슨(Atkinson) 지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균등**을 뜻하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 완전균등일 때는 로렌츠 곡선과 대각선이 일치한다.

선지별 해설

이 문항은 소득이 음수가 아니고 평균소득이 양수인 통상적인 소득분포를 전제로 한다.

① O: 애킨슨 지수는 사회가 불평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나타내는 **불평등 회피 정도**를 반영한다. 같은 소득분포라도 이 가치판단의 정도가 달라지면 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하는지가 사회후생함수를 통해 반영된다.

② O: 로렌츠 곡선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누적한 인구 비율에 대응하는 누적 소득 비율을 나타낸다. 대각선은 인구의 일정 비율이 같은 비율의 소득을 차지하는 완전균등선이다. 곡선이 이 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

③ X: 지니계수는 완전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완전균등선 아래 삼각형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0이 완전균등**을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교과서의 정규화된 설명에서 1은 완전불평등을 나타내므로, 보기에서는 양 끝의 의미를 반대로 설명했다.

④ O: 애킨슨 지수는 A=1-(y_e)/(y)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평균소득은 y, 현재 분배와 같은 사회후생을 주도록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누는 소득인 균등분배대등소득은 y_e이다. 통상적인 불평등 회피 가정에서 0≤ y_e≤ y이므로 지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값이 클수록 불평등으로 인한 후생 손실이 크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니계수 1을 완전균등으로 설명한 ③이 옳지 않다.

NoteBase

문 33. 물가지수가 100에서 105로 상승했을 때, 명목이자율이 10%이고, 이자소득세율이 20%인 경우, 세후 실질이자율은?

① 3%

② 4%

③ 5%

④ 6%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명목이자에 먼저 세금을 적용하면 세후 명목이자율은 $10\% \times (1 - 20\%) = 8\%$이다. 여기서 물가상승률 5%를 차감하는 **근사식**을 쓰면 세후 실질이자율은 3%이다.

계산 과정

세후 실질이자율은 먼저 명목 이자소득에서 세금을 뺀 뒤, 물가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를 반영하여 구한다. 이 문항의 선택지는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하는 근사식에 대응한다.

물가지수가 100에서 105로 상승했으므로 물가상승률은 $\pi = \frac{105 - 100}{100} = 0.05 = 5\%$이다. 증가한 5를 기초 물가지수 100으로 나눈다.

명목이자율을 $i = 10\%$, 이자소득세율을 $t = 20\%$라 하면 세후 명목이자율은 $i(1 - t) = 0.10 \times (1 - 0.20) = 0.08 = 8\%$이다. 세금은 실질이자가 아니라 명목 이자소득에 부과되므로, 물가상승률을 먼저 뺀 값에 세율을 적용하면 안 된다.

세후 실질이자율의 근사식은 $r_{\text{after}} \approx i(1 - t) - \pi$이다. 따라서 $r_{\text{after}} \approx 0.08 - 0.05 = 0.03 = 3\%$이다.

엄밀한 구매력 기준으로는 $r_{\text{after}} = \frac{1 + i(1 - t)}{1 + \pi} - 1 = \frac{1.08}{1.05} - 1 \approx 2.86\%$이다. 따라서 **3%는 근사식으로 얻는 값**이며, 이 문항에서 제시된 선택지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4. A와 B, 두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A의 효용(U_A)은 10, B의 효용(U_B)은 20이라고 하자. 롤스(J. Rawls)적 사회후생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A와 B, 두 사람의 소득에 대한 효용함수는 동일하다)

①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의 형태를 갖는다.

② 사회후생(SW)은 $SW = U_A + U_B$이다.

③ A의 효용이 증가하지 않는 한 사회후생은 증가하지 않는다.

④ A와 B의 소득이 동일할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롤스적 사회후생은 효용의 합이 아니라 **가장 낮은 효용**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A의 효용이 10, B의 효용이 20이면 사회후생은 10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롤스적 사회후생함수는 $SW = \min\{U_A, U_B\}$이다. 두 효용 중 작은 값만 후생을 결정하므로, 그 값을 그대로 두고 더 큰 효용만 높여도 후생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효용 공간의 사회무차별곡선은 두 효용이 같은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L자 형태이다.

② X: $SW = U_A + U_B$는 두 사람의 효용 합으로 평가하는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이다. 롤스적 기준에서는 합이 아니라 **최저 효용**을 사용하므로 현재 사회후생은 $SW = \min\{10, 20\} = 10$이다.

③ O: 현재 가장 낮은 효용을 가진 사람은 A이다. A의 효용이 10에 머물면 B의 효용만 증가하여도 최저 효용은 10이므로 사회후생이 증가하지 않는다. 사회후생이 현재보다 커지려면 A의 효용이 증가해야 하며, 동시에 B의 효용도 새로운 최저 수준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④ O: 주어진 총소득을 손실 없이 배분하는 통상적인 분배 모형에서 두 사람의 소득에 대한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증가한다면, 소득이 같은 때 최저 효용을 가장 크게 할 수 있다. 소득이 더 많은 B에게서 더 적은 A로 소득을 이전하면 두 소득이 같아질 때까지 낮은 쪽의 효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총소득과 이전 가능성 등 분배 조건이 주어진 상황의 결론이며, 이전 비용이나 생산 유인까지 고려한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균등 분배가 최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35. 다음 중 코즈(Coase)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ㄱ. 외부성의 해결에 대한 시장적 접근이다.
ㄴ. 협상비용이 과다하면 적용되기 어렵다.
ㄷ. 재산권의 귀속주체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ㄹ. 외부성에 대한 정부의 수량규제가 요구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코즈 정리는 명확한 재산권과 낮은 거래비용 아래 **당사자 간 협상**으로 외부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이다.
최초 권리의 귀속과 관계없이 효율적 결과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정부의 수량규제가 필수라는 주장은 아니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거나 충분히 작으면, 외부효과의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협상과 보상**을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고 효율적인 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접근이다. 정부가 직접 최적 수량을 정하는 방식과 구별된다.

ㄴ. O: 당사자 탐색, 정보 수집, 협상, 계약 체결과 이행에 비용이 많이 들면 협상으로 얻는 이익보다 비용이 커질 수 있다. 당사자가 매우 많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과다한 거래·협상비용**은 코즈 정리의 현실적 적용을 제한한다.

ㄷ. O: 정리의 조건 아래에서는 최초 재산권이 어느 쪽에 주어졌더라도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재산권의 배분이 소득분배까지 무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누가 보상을 지급하거나 받는지와 협상 후 각자의 이익은 달라진다. 또 최종 생산량까지 항상 같다는 강한 결론에는 소득효과가 없다는 등의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

ㄹ. X: 코즈 정리에서 효율적 해결의 핵심은 재산권에 바탕을 둔 당사자 간 협상이지, 정부의 수량규제를 필수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재산권을 명확히 하고 계약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직접적인 생산량·오염량 규제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옳은 설명은 ㄱ, ㄴ, ㄷ의 3개이므로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36. 순수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증가하여도 1인당 사용량은 감소하지 않는다.

②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③ 민간부문에서의 공급은 불가능하다.

④ 추가소비의 한계비용이 0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순수공공재는 무임승차 때문에 민간에서 과소공급되기 쉽지만 **민간 공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발적 기여나 민간 생산 등을 통한 공급도 가능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성을 가지므로 한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양이 줄지 않는다. 주어진 공공재의 공급량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함께 소비**할 수 있다.

② O: 비배제성 때문에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을 편익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담으로 제공된 재화를 이용하려는 **무임승차 유인**이 발생한다.

③ X: 무임승차로 자발적인 비용 부담이 부족하여 민간 공급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미달하기 쉽지만, **민간 공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부나 자발적 공동 부담 등으로 공급될 수 있으며,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고 민간이 생산하는 경우도 있다.

④ O: 이미 일정량이 제공된 순수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날 때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거나 추가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소비자의 한계비용은 0이다. 이는 **소비자 수의 증가에 따른 비용**을 뜻하며, 공공재 자체의 공급량을 늘리는 생산비용까지 0이라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③이 가장 옳지 않다.

NoteBase

문 37. 투표의 역설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 선호의 이행성이 있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이행성이 충족되지 않는다.

② 중위투표자정리 현상이 나타난다.

③ 안건의 비교 순서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④ 1차원 안건에 대하여 단봉선호인 경우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투표의 역설은 다수결의 집단선호가 순환하여 안정적인 승자가 정해지지 않는 현상이다. 반면 중위투표자정리는 1차원 안건과 단봉선호 등의 조건에서 **중위투표자의 최선호 대안이 다수결 승자**가 된다는 내용이므로 투표의 역설과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투표의 역설은 개인마다 일관된 선호순서를 가지고 있어도, 대안을 두 개씩 다수결로 비교하면 집단의 선호순서가 순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B에, B가 C에, C가 A에 각각 다수결로 승리하면 전체를 일관된 순서로 배열할 수 없다.

① O: 이행성이란 A를 B보다, B를 C보다 선호하면 A를 C보다 선호하는 성질이다. 투표의 역설에서는 각 개인의 선호가 이행성을 충족해도 다수결로 집계한 사회적 선호에는 이 성질이 성립하지 않는다. 개인의 일관성이 집단의 일관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X: 중위투표자정리는 투표의 역설이 나타난다는 주장이 아니다. 안건이 한 차원에 배열되고 모든 유권자의 선호가 단봉형인 등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중위투표자의 최선호 대안이 다른 대안과의 일대일 다수결에서 승리한다. 즉 **안정적인 다수결 승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설명하며, 승패가 순환하는 투표의 역설과 대비된다.

③ O: 순환적 선호에서는 순차적으로 두 대안씩 표결할 때 비교 순서가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A가 B에, B가 C에, C가 A에 이기면 A와 B를 먼저 비교한 뒤 승자를 C와 비교할 때 C가 최종 승자가 된다. 반대로 B와 C를 먼저 비교한 뒤 승자를 A와 비교하면 A가 최종 승자가 된다.

④ O: 1차원 안건에 대해 모든 투표자가 공통된 대안 배열 위에서 단봉선호를 가지면 전형적인 다수결 순환은 발생하지 않는다. 각 투표자는 자신의 최선호 지점을 중심으로 한쪽 방향으로 더 멀어질수록 낮게 평가하므로, 중간의 최선호 지점을 가진 투표자의 대안을 중심으로 일관된 다수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통상 중위투표자를 하나로 정하는 설명에서는 홀수의 투표자와 엄격한 선호를 전제하며, 동률 문제는 순환과 구별한다.

NoteBase

문 38. 건강보조식품의 공급곡선은 가격에 대하여 무한탄력적이고,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건강보조식품 1단위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할 때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의 거래량은 증가한다.

② 생산자의 실질적 혜택은 없다.

③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④ 사회후생은 증가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보조금 혜택이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귀착된다. 그러나 정부 지출까지 고려하면 과잉생산이 발생하여 **사회후생은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외부효과 등 별도의 시장실패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경쟁시장의 잉여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초 가격을 P, 수량을 Q_0, 단위당 보조금을 s라고 하자.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공급곡선은 수평이고, 생산자가 보조금까지 포함하여 받는 가격은 P로 유지된다. 소비자 지불가격은 $P_c = P - s$로 하락하며 새 거래량 Q_1은 Q_0보다 커진다.

① O: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보조금만큼 하락하므로 우하향 수요곡선상에서 수요량이 늘어난다. 따라서 **시장의 거래량은 증가**한다.

② O: 생산자는 소비자에게서 낮아진 가격을 받지만 보조금을 더하면 종전과 같은 가격을 받는다. 즉 $P_p = P_c + s = P$이다. 수평 공급곡선 아래의 한계비용도 일정하므로 생산량 증가로 추가되는 경제적 잉여가 없으며, 보조금의 실질적 가격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③ O: 가격 하락으로 기존 구매량에 대한 지출이 줄고 추가 소비에서도 잉여가 생긴다. 직선 수요곡선에서 소비자잉여 증가분은 Δ CS=sQ_0+12s(Q_1-Q_0)이므로 양수이다.

④ X: 사회후생은 소비자잉여만이 아니라 생산자잉여와 **정부의 보조금 지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 지출은 sQ_1이고 생산자잉여는 변하지 않으므로, 순후생 변화는 Δ W=Δ CS-sQ_1=-12s(Q_1-Q_0)이다. 추가 생산분의 한계비용이 소비자의 한계편익보다 커 과잉생산에 따른 후생손실이 생긴다.

따라서 사회후생이 증가한다는 ④가 옳지 않다.

NoteBase

문 39. 조세 함수가 $T = 0.3Y - 900$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단, T는 세금, Y는 소득이다)

①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은 1보다 크다.

② 선형누진세에 해당한다.

③ 평균세율은 일정하다.

④ 한계세율은 일정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평균세율은 $\frac{T}{Y} = 0.3 - \frac{900}{Y}$이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상승한다. 일정한 것은 평균세율이 아니라 **30%의 한계세율**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양의 조세수입이 발생하는 납세 구간 $Y > 3{,}000$에서 소득탄력성은 $\varepsilon_{T,Y} = \frac{dT}{dY}\frac{Y}{T} = \frac{0.3Y}{0.3Y - 900} > 1$이다. 분모가 양수이고 분자보다 작으므로 세수는 소득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한다. 이 설명은 **세액이 양수인 구간**에 관한 것이며, 세액이 0인 경계에서는 이 탄력성이 정의되지 않고 음의 세액 구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② O: 세액 T는 소득 Y의 일차함수이지만, 평균세율은 소득이 늘수록 상승한다. 이처럼 **한계세율은 일정하고 평균세율은 증가**하는 구조를 선형누진세라고 한다. 세액이 직선적으로 증가한다는 것과 비례세라는 것은 다르다.

③ X: 평균세율은 $ATR = \frac{T}{Y} = 0.3 - \frac{900}{Y}$이다. 양의 소득 Y가 증가하면 공제 효과를 나타내는 $\frac{900}{Y}$가 작아지므로 평균세율은 상승한다. 따라서 **평균세율은 일정하지 않다**. 납세 구간에서 평균세율은 30%보다 낮고 소득 증가에 따라 30%에 접근한다.

④ O: 한계세율은 소득이 한 단위 늘 때 추가되는 세액의 비율이므로 $MTR = \frac{dT}{dY} = 0.3$이다. 상수항 −900은 기울기를 바꾸지 않으므로 **한계세율은 30%로 일정**하다.

NoteBase

문 40. 외부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한다.

② 자발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③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다.

④ 대가나 보상이 없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외부효과도 **권리가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충분히 낮으면 당사자 간 협상으로 내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인 해결이 언제나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생산·소비 활동이 다른 사람의 효용이나 생산에 영향을 주면서도 그 영향이 시장의 가격과 거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이다. '시장의 테두리 밖'은 물리적으로 시장 밖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는 영향**이라는 뜻이다.

② X: 외부효과가 있다고 자발적 해결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권리가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거나 충분히 작으며 협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보상과 합의를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 다만 이해당사자가 많거나 정보·협상 비용이 크면 이러한 해결이 어려워진다.

③ O: 통상적인 외부효과의 예에서는 자신의 생산·소비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부수적인 편익이나 피해를 준다. 예컨대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염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이다. 여기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이런 부수 효과를 가리키며, 행위자가 그 영향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야만 외부효과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O: 외부효과가 내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3자에게 준 편익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 협상이나 정책으로 적절한 대가·보상이 반영되면 이 차이를 줄일 수 있다.

NoteBase